

尹 대국민 담화에 들끓는 전북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4차 대국민 담화 내용이 전북을 들끓게 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 “물염치의 극치… 대국민 선전포고”
먼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물염치의 극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윤석열의 아첨 대국민담화는 물염치의 극치이고,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날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이라는 표현을 썼다.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국민을 내전으로 몰고 가려는 정신나간 기자회견”이라며 “국민의 불행과 고통을 하루빨리 막기 위해서는 즉각 탄핵하고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토요일 탄핵이 아닌 즉각 탄핵을 추진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도의회 “14일尹 탄핵 기결로 국민의 명령 완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도 성명을 발표하고 “오는 14일 탄핵 기결로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을 대표해 사난이 대변인은 “윤석열의 오늘 4차 대국민담화는 윤석열의 극우적 망상과 비상식적인 인식을 입증한 시간이었다.”며 “윤석열의 언어

김관영 도지사 “물염치의 극치… 대국민 선전포고”

도의회 “극우적 망상 입증… 탄핵 기결로 명령 완수”

민주 도당 “자신의 잘못 은폐하려는 거짓 선동 반복”

정의 도당 “반 헌법적 비상계엄령 합리화 못해 회화화”

는 정치의 언어가 아니며, 윤석열의 담화는 정치를 파괴하고 국정을 교란하겠다는 범죄의 뜻을 고백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화와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고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발상을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윤석열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우리의 판단이 옳았음을 역설적으로 입증했다.”고 이야기 했다.

서 대변인은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의 지극히 위험한 정세 인식이 시한폭탄으로 다가온다.”며, “이 같은 불안과 공포가 대한민국 국격과 경제를 가차 없이 추락시키고 있다.”고 하며,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공동체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불러온 국정 혼란에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가비상사국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주 전북자치도당 “광란의 칼

춤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도 “윤석열 대통령은 광란의 칼춤을 당장 끝내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윤석열의 오늘 담화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현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윤석열의 독단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정당화하려는 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은 헌법적 절차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다.”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에 투입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을 무력화하려는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로,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윤석열은 ‘질서 유지’라는 미명 하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권력 유지와 정치적 계산을 위한 조치임이 명백하다.”며, “국화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이러한 폭거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은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거짓 선동과 책임 전가를 반복했다.”며, “본인의 독단적 계엄 발동에 대한 비판을 가대 야당과 특정 세력에 몰리며, 허위 사실을 남발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 “당장尹 체포·구속하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오현숙)도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당국은 지금 당장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극우 유투버 수준의 대국민 담화에 국민은 다시 한번 자괴감과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윤석열은 반 헌법적 비상계엄령을 합리화하다 못해 회화화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12월 12일에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극우 보수세력에 대한 결집과 행동을 요구하는 선동의 메시지로, 오늘의 윤석열의 담화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말하며, “수사당국은 지금 당장 윤석열을 체포·구속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만호 기자

“조국의 심장으로 민주주의 지킬 것”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조국 대표 의원직 상실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12일 조국 당대표의 대법원의 징역 2년 형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 상실과 구속 수감되는데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모두에 “윤석열은 변하지 않았다.”며, “그는 언제나 민주주의의 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에 대한 광란의 수사에서 시작된 권력 남용은 결국 오늘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다.”며, “당시의 편파적이고 과도한 수사는 단지 조국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억누르기 위한 폭력이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검찰의 조국 멸문지화 수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승인한 대법원의 판결에 경악과 당혹과 분노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권력의 폭주”라며, “이는 조국 대표와 그의 가족이 겪었던 살인적 수사와 동일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유린하는 권력의 폭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창당했을 때의 초심 그대로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해방전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와도 연대하여 맨 앞에서 싸우고 맨 마지막까지 남은 조국혁신당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비록 조국 당대표가 영여의 몸이 되었지만, 전북지역 정치혁신을 위한 깃발을 결코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정치의 기복권에 맞서 전북 정치를 혁신하고 전북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국 대표는 언제 어디서나 조국혁신당의 심장이며, 그의 검찰개혁과 제7화국을 향한 열망은 우리의 중심에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전북도민과 함께 윤석열 탄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를 통해 조국 대표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국 당대표의 국회의원직 상실에 따라 후순위자인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위 13번인 백선희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진 오른쪽)이 1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 내년 본예산안 등 심사 의결

자치도 본예산 9조8179억 교육청 본예산 4조5599억

올해 추경은 자치도 9조3796억 · 교육청 4조6183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등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일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안 총 9조 8,439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공익수당)’(29억원 전액 삭감) 등 총 68건에 258억8,000만원을 삭감했으며, 특별회계에서 ‘의용소방대 다기능순찰차 구입’1건에 1억 2천만원의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조2,359억 원 중, ‘전북특별자치도 공역환경교육센터 지원’ 등 3건에 1억4,000만원을 삭감해 예치금에 반영토록 했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4조 5,732억 원 중 ‘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구축(50억원 전액 삭감)’ 등 총 52건 133억원을 삭감했으며,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4조6,187억원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람의 장화화(4억원 삭감)’ 1건에

4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공익수당), 캠퍼스 테크타운 조성 및 운영 등이 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사업과 중·고 통학 대중교통비 지원 등이 있다.

김성수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등 심사는 특히 2년 연속 세수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정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입추계는 적정하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재원 배분이 아닌지, 필요한 사전절차는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했다”며, “2025년도 본예산 집행 시에는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을 추진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을 최소화하는 물론, 경기 부양과 민생안정 및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등은 13일,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만호 기자

“14일,尹 탄핵 위한 1만 전북도민대회 선포” |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가 1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 오후 4시부터 전주 객사 종패지관 앞에서 1만 전북도민대회 선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투표가 오후 5시에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지난 7일에 있었던 탄핵소추 투표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탄핵이 성사되지 못해 국민들이 많이 실망한 상태에서 재차 탄핵소추 투표가 이루어지기에 국민들의 기대도 크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이탈표도 예상되고 있어 탄핵 의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4차 담화로 인해 격앙된 상태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준비된 기자회견문보다 현장에서 더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민주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고3 수생생들이 내복조차 입지 않고 2-3시간 씩 탄핵을 외치고 있는 희망의 대한민국 현장에서 오는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유투버나 할 수 있는 말을 회전에서 하여 계엄에 대해 스스로 내란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위해 10대부터 70대까지 참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모으자”고 하며 도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서 전영호 송미옥 대표는 “윤석열 통치 이후 노동자 농민 서민의 생활은 나라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쌀값 하락에도 값을 올려주지 않아 30년 동안 제자리에 있어 밥 한 공기에 300원으로 꺾 한 통값, 라면 한 봉지값만도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끝까지 투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가 1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 오후 4시부터 전주 객사 종패지관 앞에서 1만 전북도민대회 선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쟁할 것이며, 윤석열을 탄핵하고 책임 농정을 시행하여 농민이 사랑받는 세상이 올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인 이창영 위원장은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국민의 안위는 없고 자신의 안위만 있을 따름이므로, 거짓말과 변명의 연속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민주공화국을 향해 총을 겨누는 순간부터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며, “윤석열은 즉각 퇴진해야 하며, 체포 구속과 수사를 통해 법정에 서야 하는 내란세력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창엽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전북도민에게 12월 14일 오후 4시 종패지관 앞으로 모여 줄 것”을 호소하며, “윤석열은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45년 전으로 후퇴시켰다”며, “민주공화국 시민으로 절대 용납하지 말고 이반주 토요일 1만 전북도민이 전국의 시민들과 연대하여 내

란수와 윤석열 세력을 타도하고 민주공화국을 지키자”고 역설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 측에서는 “이번 탄핵추진을 계기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추진을 위해 전국 1549개 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상임대표, 전북비상사국회의 방용승 대표, 전북교육연대 차상철 대표, 전북평화연대(준)한명길 준비위원장,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석환 이사장, 민주노총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 전농전북도연맹 황양택 의장, 전여농전북도연합 송미옥회장이 공동상임대표자로 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이 대변인을 맡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박상준 사무처장과 전농 전북도연맹 정충식 사무처장이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고문으로는 김관수 · 문규현 · 서정길 · 이광석 · 이석영 · 최재훈 · 황민주 · 한상열씨가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